

다시 주목받는 산업정책 : 산업 전략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 • • •

2025-07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25-07]

다시 주목받는 산업정책 :
산업 전략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Contents

I. 서론	1
II. 산업정책 거버넌스 분석	3
III. 결론 및 시사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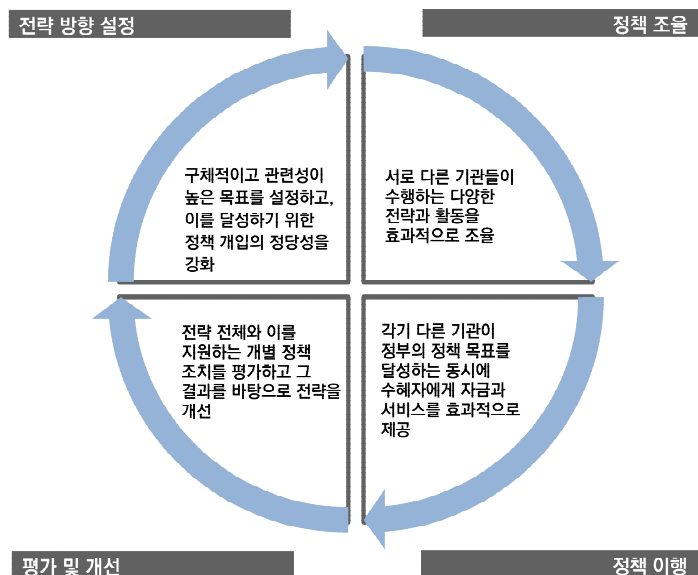
*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dustrial Strategies(OECD, 2025.6.)」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

요 약

■ 최근 산업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에너지 전환 지원이나 경제 복원력 강화와 같은 광범위한 목표가 추가되면서, ‘新’산업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면밀한 분석 필요성이 대두

- R&D 세액공제, 보조금 등 산업 정책 조치의 효과성이나 이를 산업 전략으로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조명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는 ‘제도’가 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이 부각
-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이를 수립하는 과정의 분절화도 심화되므로, 新 산업 전략을 통해 각 조직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실제 이행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의 중요성 제고
 - 경쟁, 조세, 노동시장, 무역, 투자 정책 등 소위 ‘기본 여건(framework conditions)’을 다루는 정책 영역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모두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이 핵심
 - 다만, 특정 정책 수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업 정책의 ‘거버넌스’를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
- 특히 산업 정책은 다른 정책 영역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데다 여러 정책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필수적

〈그림〉 정책 주기



- OECD는 국가 산업 정책의 제도적 거버넌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❶전략 방향 설정 ❷정책 조율 ❸정책 집행 ❹평가·개선의 4단계 정책 주기에 기반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

※ 특정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해법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 관행을 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 초기 벤치마킹 연구로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이 참여한 시범 설문 조사 결과를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리

■ (전략 방향 설정) 산업 전략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사회적 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

- (진단) 경제의 강·약점 등을 파악하는 ‘진단’ 단계는 산업 전략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생산성·수출 등의 지표* 외에도 다양한 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생산성, 혁신, 기업 동향, 수출, 단위 노동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신기술 도입률, 지역 간 격차 등

-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정부가 국가·산업·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해야 하며,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
- 진단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데이터 전문가를 참여시킬 경우 정부의 데이터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타 공공기관과의 협력 또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효과적

- (사회적·정치적 합의)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 간에 합의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업과 시민사회의 합의 과정 참여도 병행하여 추진 필요

- 다만, 민간 부문이 전략 수립에 참여할 경우 단기 수익성 중심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 산업·업령·규모의 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등 참여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포획 위험성을 방지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방향성 서술) 전략을 정보에 기반한 명확한 문서로 체계화할 경우 정책 주기 전 단계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국가의 산업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

- (목표 모니터링) 산업 전략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는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나 이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때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뒷받침

- 다만, 설문 참여국 중 목표 달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 미달 시 정책을 재설계·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략 설계 단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

■ (정책 조율) 산업 정책은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고 경쟁 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 기존 규제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정부 내 관련 주체를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

- (일관성·완결성을 갖춘 정책 설계) 산업 전략에 포함되는 계획과 조치를 통해 ▲다양한 정책 조율 ▲산업 전략 내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기본 정책 조건과의 상충 방지 ▲재정 지원의 일관성 유지를 도모해야 하며, 이때 포트폴리오 접근방식이 유용
- (수평적 조율) 국가의 역량은 산업 정책 총괄 부처와 보완 정책을 담당하는 타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마련될 때 극대화되는데, 이때 다른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 타 부처와의 정기 논의 및 수시 협의가 중요
- (수직적 체계화) 국가의 산업 정책 이행 역량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좌우되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자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독립 전문기관 또한 정부부처와 수직적 관계를 형성

■ (정책 이행) 정책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성을 확립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

- (책임성 확립) 산업 전략과 관련해 정책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더라도 이행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단일의 고위급 기관이 책임을 지는 정책 책임성* 확립 필요
* '정책 책임성(policy ownership)'이란 책임 기관이 목표와 달성 수단을 수용·지지하고, 필요한 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것을 의미
- (이행 계획 수립) ▲이행 주체와 이해 관계 ▲필요 자원과 공급 주체 ▲촉진·저해 요인 ▲이행·재평가 일정 등을 명확히 설정

■ (평가 및 개선) 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시행 및 개선 추진

- (평가) 포괄적인 전략, 개별 정책 조치에 대한 지표와 평가 절차를 포함하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 전문 공급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활용
- (개선) 국가와 산하 기관은 평가 활동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받고 이를 학습하여 필요시 정책 수단을 개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수

■ 지정학 갈등, 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산업 정책이 산업·제조업 육성을 넘어 국가 복원력 확보를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 상황에서,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설계·이행 거버넌스에 대한 점검·강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

- (전략 방향 설정) 경제·산업 ‘진단’ 단계에 기업 단위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방안 마련, 분석기관·학계·산업계의 분석 과정 참여 증진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정책 수립 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기업 중심의 포획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계·데이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기업, 영세 산업,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방식 강화도 고려 가능
- (정책 조율)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의 다각적인 정책 목표가 부여되면서 환경부, 과기부 등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대두
 -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협업 행정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처간 칸막이 해소, 협업 문화 증진 등의 과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별 부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범부처 계획은 부재한 상황
 - * ▲「법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최초 수립('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 협업’을 최초로 규정하고('16.4) 협업 촉진, 관련 과제 발굴 등의 내용 수록('24.5) ▲「법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20, '21) 시행 등
 -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 AI·양자 등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술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 기후 위기 대응을 주관하는 환경부 등과 수평적 조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기적인 협의 체계를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정책 이행) 정책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부처 간 인사 교류 프로그램 확대, 외부 전문가 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책 홍보와 안내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기업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
- (정책 평가·개선) 우리나라는 법률로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현장의 패드백을 효율적으로 수집·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실화함으로써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원문정보】

- OECD,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dustrial Strategies, 2025.6

I. 서론

■ 최근 산업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에너지 전환 지원이나 경제 복원력 강화와 같은 광범위한 목표가 추가되면서, ‘新’산업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면밀한 분석 필요성이 대두

- R&D 세액공제, 보조금 등 산업 정책 조치의 효과성이나 이를 산업 전략으로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조명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는 ‘제도’가 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이 부각
 - ※ 동 보고서는 산업 정책을 ‘자국 기업 부문의 성과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입’이라는 OECD의 정의를 따르며,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수단의 집합’인 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초점
-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이를 수립하는 과정의 분절화도 심화되므로, 新 산업 전략을 통해 각 조직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실제 이행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의 중요성 제고
 - 경쟁, 조세, 노동시장, 무역, 투자 정책 등 소위 ‘기본 여건(framework conditions)’을 다루는 정책 영역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모두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이 핵심
 - 다만, 특정 정책 수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업 정책의 ‘거버넌스’를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
- 여러 정부가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OECD는 회원국 설문 조사, 정책 연구, 문헌에서 도출한 프레임워크와 주요 사례 등을 바탕으로 각국이 산업 전략을 위한 제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이번 보고서를 마련
 - 특히 ‘거버넌스 수단’을 통해 국가의 산업 정책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개념적·실증적으로 검토
 - 공공 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 문헌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 보고서는 기존 문헌의 개념과 사례를 참고하되 산업 정책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

- OECD는 회원국 전반의 산업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한 초기 벤치마킹 연구로서, 산업 정책 거버넌스를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
 -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이 참여한 시범 설문 조사 결과를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리
- 산업 정책 프레임워크는 ❶전략 방향 설정 ❷정책 조율 ❸정책 이행 ❹평가·개선 의 네 단계로 구성
 - (전략 방향 설정)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상황과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향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합의 도출
 - (정책 조율) 정부 조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을 조율하고, 산업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률과 규제도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포괄성과 일관성을 담보
 - (정책 이행) 정부 프로젝트를 현실과 연결하는 핵심 단계로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유연성 확보, 이행 기관의 역량 강화가 중요
 - (평가·개선)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조치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창출
- 기존 문헌과 일부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특정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해법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 관행을 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 향후 연구에서 설문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조사 대상을 확대해 보다 견고한 모범 사례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 산업정책 거버넌스 분석

■ OECD는 산업 정책 거버넌스 분석을 위해 데스크 리서치를 바탕으로 국가 설문 프레임워크와 문항을 설계하고, 각국의 전략 분석 프로젝트와 STIP COMPASS*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사례**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완

*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STIP) 트렌드에 대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한 EU와 OECD의 합동 이니셔티브

** 네덜란드의 탄소중립 산업 전략 평가, 이탈리아의 근거 기반 경제 개발 정책 지원 분석 등

- 설문 문항은 정책 주기의 ①전략 방향 설정 ②정책 조율 ③정책 이행 ④평가·개선의 네 가지 주요 차원을 따라, 산업 전략의 거버넌스와 개선 방안을 고찰할 수 있도록 구성
 -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가 참여한 시범 조사('24.5) 및 여기에 영국을 더한 워크숍('24.6) 결과를 종합·분석

〈표 1〉 설문 참여국 기본 정보

구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종합적인 국가 산업 전략 보유	X	O	O	O	X
EU 회원국	O	O	O	O	X
인구('22)	910만 명	130만 명	510만 명	210만 명	6,730만 명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 비중('22)	17.7%	14.5%	39.9%	22.6%	9.4%

1. 전략 방향 설정

■ (진단) 산업 전략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경제의 강·약점 등을 파악하는 ‘진단’ 단계로, 생산성·수출 등의 지표* 외에도 다양한 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생산성, 혁신, 기업 동향, 수출, 단위 노동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신기술 도입률, 지역 간 격차 등

-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정부가 국가·산업·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해야 하며,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

- 자국 최신 데이터는 국가 통계기관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OECD가 수집한 타국 데이터도 벤치마킹에 유용

- ※ 설문 참여 국가는 모두 자국 통계청(NSO)에서, EU 회원국의 경우 유로스타트(Eurostat)에서 데이터를 획득한다고 답변

- 특정 목적의 기업 단위 설문조사 결과는 신기술 등의 분야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효과적
- 세무당국이 생성하는 기업 단위 행정 데이터는 모든 기업을 포괄하고 있어 경제 진단에 효과적인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

- 진단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데이터 전문가를 참여시킬 경우 정부의 데이터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타 공공기관과의 협력 또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효과적

- 설문 참여국 중 일부가 이러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는 국가통계청(NSO) 외에도 오스트리아국립은행 등 여러 공공기관과 공조

- 한편, 설문 참여 국가가 학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대신 학계 전문가는 전문·컨설팅 기업의 컨설턴트나 직원으로 참여 가능

- ※ (예) 영국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이 최근 자국에 대한 진단 작업을 실시

- 정부가 독자적으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산업위원회나 국가생산성위원회 같은 혼합형 기구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책 역량을 강화 가능

- 혼합형 참여 기구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나 경쟁력과 관련된 정책과 동향을 분석하는 역할 담당

- 일부 국가가 슬로베니아의 ‘전략연구혁신파트너십(SRIPs)’과 같은 독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동 기구는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는 산업계, 학계와 협력

※ 전략연구혁신파트너십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설문 국가 중 집단 단계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경우는 아일랜드 외 전무

■ **(사회적·정치적 합의)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 간에 합의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업과 시민사회의 합의 과정 참여도 병행 필요**

- 전체 설문 대상국이 경제 또는 산업 담당부처가 합의 구축 활동을 주도한다고 답변한 가운데, 산업 전략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이해관계자 그룹도 ‘정부 부처나 기관’으로 확인
 -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정부 부처 간 먼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등한 위계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협조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이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 도달을 뒷받침 가능
- 설문 결과 합의 도출을 위한 두 번째 이해관계자 그룹은 ‘기업 부문’으로 조사되었으나, 민간 부문이 전략 수립에 참여할 경우 단기 수익성 중심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위험성 부각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 산업·업령·규모의 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참여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포획 위험성*을 방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risk of capture) 규제 기관이 산업이나 집단에 포획되어 피규제집단에 유리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될 위험
 -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와 같은 대규모 기업 조직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협회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산업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한편,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시민의 동의 확보가 중요한 부분임에도 설문 대상국의 언급이 없는 편으로, 이는 시민 집단이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를 보유한 기업보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
- 생산성, 고용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조치의 효과는 그에 따르는 편파적 특혜, 집중 위험 등의 부작용과 비교·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이에 따라 산업 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합의’ 도출 초기부터 산업 전략과 사회 정책, 국가·초국가적 우선순위를 연결하는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임무지향 정책을 활용 가능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온라인 협의 방식은 초기 비용 절감에 유리하나 많은 양의 의견 처리 시 자원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설문 참여국 중 상당수가 최소 한 번 이상 진행한 것으로 조사
 - ※ 온라인 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디지털 접근성이 제한된 소기업이나 장기 실업자 등의 일부 집단이 배제될 우려도 있어, 설계 시 운영 기간과 시점, 지원 수준 등에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 필요
 - 따라서 오프라인 방식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에 닿기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용
 - 특히 정부 부처가 주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대면 방식의 행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다소 폐쇄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
 - ※ ▲정부 부처가 협의 주체이자 발표자인 컨퍼런스가 대표적인 대면 행사에 해당 ▲워크숍, 원탁회의 등은 청중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 ▲정부부처의 발표와 분과 세션을 결합한 심포지엄 방식도 활용
 - 협의 시기도 중요한 요소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
 - 일부 설문 참여국은 산업 전략 초안을 발표하는 사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초안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 (방향성 서술) 전략을 정보에 기반한 명확한 문서로 체계화할 경우 정책 주기 전 단계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국가의 산업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
- 이상적인 산업 전략은 공개 문서, 장기적인 비전 제공, 정책 연계 등의 특성을 보유
 - ▲문서화 및 일반 공개 ▲관계 부처·정부가 수립 주체 ▲자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 비전 요약 ▲비전 달성을 위해 여러 정책 간의 연계 방안 제시 ▲정치 변화에도 지속되는 정당성 확보 ▲필요시 정량적 목표 제시 등
 - 문서화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전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는 산업 정책 이니셔티브 전체를 목록으로 정리한 웹사이트를 운영
 - 영국의 경우 일부 문서가 이상적인 산업 전략의 기준을 몇 가지 충족하기는 하지만, 국가 전략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 일부 국가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립해, 성장 유망 분야에 관심과 지원 조치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않으며 타 분야나 사회 전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가 간과될 우려도 존재

* (예) 칠레의 「국가리튬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

- 임무 중심 방식은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부문별 접근방식과 다르게,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자를 동원·조율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게 하는 방안으로, 한 국가의 전체 전략을 포괄하려면 여러 임무 중심 전략이 필요

※ 노르웨이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PILOT-E(에너지·기후 기술 상용화 지원에 초점)가 대표적

■ (목표 모니터링) 산업 전략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는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나 이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때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뒷받침하는 요소

- 실제 각국 정부는 산업 전략 문서를 통해 전략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80년대 이후 목표 설정, 모니터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성과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 전략 거버넌스에도 SMART* 프레임워크 등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

* (Specific, Measurable, Ambitious and Realistic and Time-bound)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론으로, 이때 구체성, 측정 가능성, 과감성, 현실성, 시간 제한성을 충족시키는 목표 수립이 효과적

- (구체성) 전략 자체의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으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여러가지 목표를 설정 가능

※ 에스토니아는 11개, 아일랜드는 15개의 목표를 수립하고 슬로베니아는 4개 주요 지표와 34개 하위 지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목표는 절차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다수

- (측정 가능성) 서사 중심의 전략과 달리, 목표는 수치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본 연구에서 검토된 모든 전략에 생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아일랜드) 생산성 증가율 ▲(에스토니아) EU 평균 대비 명목 노동생산성 ▲(슬로베니아) 명목 화폐 가치 기준으로 목표 설정

- (과감성·현실성) 전략의 방향 제시, 정부의 활동 홍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감한 목표를 수립하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인을 고려해 현실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 (시간 제한성) 전략이 장기전 비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단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유용

※ (예) 아일랜드는 '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 공약과 관련하여 '3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실행계획 측면에서 2년 단위의 단기 목표도 함께 운용

- 다만, 설문 참여국 중 목표 달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 미달 시 정책을 재설계·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략 설계 단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
 - ※ 거시경제 상황, 팬데믹 등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므로 전략이나 평가 계획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할 필요
 -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는 2년마다, 에스토니아는 매년 내부 모니터링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와 상황을 반영해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이 외 에스토니아의 'Tree of Truth' 와 같이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지표의 변화를 추적하는 대시보드를 활용해 투명성을 개선하고 대중이 목표 미달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가능

2. 정책 조율

■ (일관성·완결성을 갖춘 정책 설계) 산업 정책은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고 경쟁 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 기존 규제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정부 내 관련 주체를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등 설문 참여국은 정책 간 일관성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전략 문서에 타 전략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에스토니아는 「연구·개발·혁신 및 기업가정신 전략」에 「에스토니아 2035 전략」, 「2021~2035 교육 전략」, 「산업 정책녹서」를 언급하였고, 아일랜드는 「기업 백서」에 15대 주요 목표와 관련된 전략을 각각 인용
 - 국가 산업 전략의 목적이 자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는 모든 기관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공동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므로,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유용
- * (예) ▲조율 전담 기구 신설 ▲기존 기관에 조정 역할 부여 ▲관계 기관이 참여해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협력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 활용
- 산업 전략은 다양한 부문과 지역, 기술 준비도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며 규범, 세금 지출, 보조금, 정부 지원 대출, 공공 보증, 공공 조달, 정부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수단을 활용
 - 전략 설계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활동 중 하나는 국제 벤치마킹으로, OECD microBERD* 프로젝트나 OECD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툴에 해당

* R&D 지원 정책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설계 방식을 논의

** QulS, STIP compa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국의 산업, 기술, 혁신 정책 사례 제공

- 산업 전략에 포함되는 계획과 조치를 통해 ▲다양한 정책 조율 ▲산업 전략 내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기본 정책 조건과의 상충 방지 ▲재정 지원의 일관성 유지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때 포트폴리오 접근방식이 유용

- 포트폴리오 방식은 유형별·부문별·시기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잠재적 중복 문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산업 전략과 관련된 기술이나 부문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재정 공백(funding gap) 발생 가능성을 간과할 우려 존재

- 특정 부문이나 기술, 주제를 우대하지 않는 수평적 정책은 원칙적으로 ‘기술 중립적’이지만, 의도치 않게 일부 기술에 편향될 가능성도 존재

※ (예) 아직 기술 준비도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예산이 필요한 녹색 수소 등의 녹색기술에서 이러한 현상 발생 가능

-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해소하기 위해 정책 설계 과정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예) 프랑스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업계와 노동조합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립산업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dustrie)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자국 제조업의 미래를 논의

- ‘재정 지원’은 국가 역량의 핵심이지만, 다양한 기업 형태, 기술, 산업을 모두 만족시키려 할 경우 한정된 공공 자원을 과도하게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 가능

※ 즉, 각국 정부, 특히 소규모 국가의 정부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산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때 예산 절차를 통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비효율적 정책 조치가 수립되지 않도록 예방 가능

- 그 외 해마다 프로그램 예산이 일관되지 않게 편성된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다개년 재정재원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주기 사이의 전환기를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때 공동 자금(co-funding) 요건을 활용하면 전환 기간 동안의 부족한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 가능

■ (수평적 조율) 산업 전략은 일반적으로 경제 또는 산업 전담 부처의 소관이지만, 광범위한 전략 목표로 인해 타 분야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부처 간 수평적 조율 필요성이 대두

- 조사 결과, 주로 경제부에서 산업 전략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경제부의 관할 업무 범위는 각 국의 경제 특성에 따라 각각 상이하였고, 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부처를 두기보다 관광, 스포츠, 무역, 노동 등 타 분야와 결합된 경우가 대다수

※ (예) 슬로베니아의 경제관광스포츠부, 에스토니아의 경제통신부, 오스트리아의 경제노동부, 아일랜드의 기업무역고용부 등

- 설문 참여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일부 OECD 회원국에서 산업을 전담하는 장·차관이 임명되고 있으며 非경제·산업 부처의 관여도 증가하는 추세

※ (예) 프랑스는 산업 담당 차관의 임명 비율이 높았고, 스페인은 산업관광부와 경제통상기업부를 별도로 운영

- 전략 목표가 광범위하므로 기술·디지털화 부처나 연구·혁신 부처도 전략 설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세금 관련 핵심 부처인 재무부와 시장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경쟁 당국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나 각 기관은 서로 다른 권한을 보유**

* (예) 에스토니아의 「연구개발혁신기업가전략」은 경제통신부와 교육연구부가 공동 주무 부처

** (예) ▲(산업부) 자국 내 전기차 생산 개발 지원 ▲(에너지부)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 생산에 초점 ▲(재무부) 전력 생산의 재정적 영향을 감독

- 국가의 역량은 산업 정책 총괄 부처와 보완 정책을 담당하는 타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마련될 때 극대화되는데, 이와 관련해 다른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 타 부처와의 정기 논의 및 수시 협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일부 국가에서는 상설* 또는 임시** 기구를 통해 부처 간 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 협정을 체결해 이러한 협력 노력을 뒷받침

* (예) 프랑스 정부 사무총국(General Secretary of the Government)이나 슬로베니아 전략위원회(Strategic Council)

** '23년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EU 연대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슬로베니아의 부처 간 태스크포스

-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 설계 단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수가 진단 단계 참여자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설계 과정이 각 부처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 대표자의 참여는 부족한 데 기인

- 총리가 산업 문제에 관여하는 하향식 접근방식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에서는 10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고 총리가 의장을 맡은 경제산업 전략위원회가 산업 전략을 수립을 담당('17)

※ 아일랜드는 정기적인 대화와 일정 수준의 수직적 권한을 결합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정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 한편, '경제투자자에 관한 내각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 장관 간 최고위급 대화를 진행(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 수반이 직접 개입)

■ (수직적 체계화) 국가의 산업 정책 이행 역량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좌우되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자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독립 전문기관 또한 정부부처와 수직적 관계를 형성

- 독립적인 전문기관은 산업 전략 실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자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

- 설문 참여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출, 혁신,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독립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관의 수평적 조직 구조는 국가마다 상이*

*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에 FDI, 수출, 혁신, 기업 활동의 4개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에스토니아는 1개 기관이 FDI, 수출, 기업가정신을 담당

〈표 2〉 설문 참여국의 대표 독립 전문기관

구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FDI	• 투자청	• 비즈니스혁신청	• 투자개발청	• 무역투자청
수출	• 오스트리아관리은행		• 기업청	• SID 은행, 무역투자청
기업	• 오스트리아진흥은행			• 슬로베니아기업기금, SID 은행, 무역투자청
혁신	• 오스트리아연구 진흥기구(FFG)	•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		• 슬로베니아연구혁신청 (ARIS)

- 각 기관은 산업 정책의 ‘공급망’에 위치해 있으므로 설계 및 실행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전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가능
- 따라서 해당 기관을 정책 시행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파트너로 간주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설문 참여국은 부처 차원 의사 결정을 실무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정부 부처-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

- 부처와 기관 간에는 명확한 수직적 위계구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의 고위 기능과 부처와의 위계는 법률로 규정
- 설문 참여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 부처-기관 간 활동 분담을 규율하는 ‘계약’ 체결 ▲(슬로베니아) 각 정책 수단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과 계약 활용 ▲(아일랜드) 부처-기관 간 ‘연간 감독·성과 이행 협정’을 통해 지원 자금과 전략 목표, 성과를 연결
- 독립 전문기관 중 일부는 민간 부문이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하는데, 오스트리아관리은행(OeKB 그룹)과 같이 상업은행 소유임에도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

- 연방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국토가 넓은 국가 중 다수는 지역 및 지방 당국이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

※ (예) 오버외스터라이히 주는 투자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 보유

- 작은 정부가 특정 지역의 보다 정확한 데이터, 관련성 높은 지표, 강점과 기회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 전략'은 경제 정책 수립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 가능
- 다만, 각 지역이 국가적 맥락 안에서 운영되고 국가 정책과의 관련성도 높으므로 일관성 없는 정책 실행, 자원 낭비, 지역 간 보조금 경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
-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지역의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지역을 포함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격차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율 필요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정책 실행 범위*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실행 범위는 정책 목표나 수단에 따라 가변적

- EU 회원국에 있어 수직적 조정은 EU의 전략과 정책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실제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는 자국 산업 전략 작성 시 상위 기관의 정책을 반영

※ EU 집행위의 「유럽산업 전략」('21), 「청정산업딜」('25), 드라기 보고서('24) 등은 각 회원국의 전략과 목표, 재정, 데이터 거버넌스가 유럽의 방향성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 ▲(에스토니아) 「연구개발혁신기업(RDIE) 전략」에서 유럽 회기의 권고사항을 명확히 인용 ▲(슬로베니아) 「산업 전략」 초안 작성 시 「유럽산업 전략」('21)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모두 고려
- 산업 정책 수립에 대한 초국가적 기관의 개입이 EU 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각국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수직적 조정 측면에서 유럽의 사례를 참고 가능

3. 정책 이행

■ (책임성) 산업 전략과 관련해 정책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더라도 이행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단일의 고위급 기관이 책임을 지는 정책 책임성 확립 필요

- 학계 일부에 따르면, '정책 책임성(policy ownership)'이란 책임 기관이 목표와 달성 수단을 수용·지시하고, 필요한 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것을 의미

- 설문 참여국에 따르면, 정책 이행 주체는 정부 부처나 기관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 조직에 속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산업 전략의 2개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40여개 정책 이니셔티브를 각각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배정

* 기업통상고용부 산하 부서나 중앙부처 외 타 공공기관 등

- 정책 이행에 여러 기관이 관여하게 될 경우 운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책임 분담을 통해 실행 효과성을 제고

※ (예) ▲(노르웨이) ‘부문 원칙’을 수립해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권한을 보장하고 개별 부처가 담당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아일랜드) 여러 기관이 참여해야 할 경우 실행·보고 책임을 지는 이해관계자를 지정

- 책임성은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각 기관이 과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설문 참여국은 책임 기관이 정권 교체에 영향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확인

- 부처가 정책 조치의 성과에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지만 동시에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일상적으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상위 기관은 이행 기관의 임무 수행을 지원 필요

※ (예) 아일랜드의 경우 반기별 보고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며, 관련 부서는 현장의 피드백을 적시 반영해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구현

- 결론적으로 책임성이라는 개념은 공공 부문의 리더십, 역량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정치적·기술적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산업 정책 환경에서 이러한 상호 연결된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 확충이 중요

■ (이행 관리) 이행 계획은 ▲이행 주체와 이해관계 ▲필요 자원과 공급 주체 ▲촉진·저해 요인 ▲이행·재평가 일정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유용

〈표 3〉 이행 계획의 주요 고려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이행 주체와 이해관계	• 설문 참여국은 이행 책임이 부처 내 단일 팀이나 단일 기관에 명확하게 할당되는* 상황을 선호하지만 책임이 할당되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며,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 이익단체, 개별 기업 등이 모두 정책 이행에 기여 * (예) 슬로베니아는 감독 기관에서 책임 분담을 논의·결정하여 기관의 업무 프로그램에 반영 • 이행 세부사항은 이니셔티브마다 다른데, 대상 집단(기업, 시민)이 정책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때 이행이 보다 수월해지는 것이 일반적 - 즉, 기업의 정보 장벽을 낮춰 정책 접근성을 높이면 개별 기업을 일일이 찾아가는 데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상 집단이 자연스럽게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가능

구분	주요 내용
필요 자원과 공급 주체	• 기관은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야 하나, 해당 역량은 인적·재정적 자원에 좌우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하고 경쟁적인 절차를 거쳐, 근거에 기반해 정책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가 고위 공직에 임명되어야 하며, 공무원 조직의 이직률이 낮은 만큼 직원 교육과 역량 개발이 중요 • 산업 정책 이행 기관은 복잡한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관 내에서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타 기관과의 협력이 유익 - (예) 영국은 ▲‘정부 기능’을 인사·상업·재무 등의 기능 중심으로 그룹화 ▲파견·대여·부서 간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내부 인력을 활용 ▲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방식을 활용
촉진·저해 요인	• 이행 기관의 고위직이 정책 목표를 인지·지지하고(정책의 책임성), 다른 프로그램 목표와의 충돌이 적을 때 정책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 - (예) 슬로베니아는 정책 간 목표 조율의 중요성을 인식 • 산업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배정 인력의 규모나 스킬 등의 내부 갈등을 넘어서는 공공 부문의 역량에 좌우 - 기관이나 행정부가 임무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학습하는 과정도 중요 • 이행 기관은 정책과 기업 현장의 경계에 위치한 덕분에,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해요인이나 문제를 책임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적시에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예) 아일랜드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반기 보고서 작성으로, 보고서에는 각 정책 조치별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지표가 포함
이행 및 재평가 일정	• 여러 이행 주체 간의 소통은 이행 일정이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도출하려면 단기 목표 수립이 필요 • 정부 안에서의 자원 확보 경쟁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행 기관이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인센티브와 모니터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가능 - 다만, 정책이나 기관의 성과를 지나치게 자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경우, 상위 수준의 장기 목표 대신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될 위험도 존재

4. 평가 및 개선

■ (평가) 이상적인 정책 주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설문 참여국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

- 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전략, 개별 정책 조치에 대한 지표와 평가 절차를 포함하는 ‘평가 계획’ 수립이 필요
 - 설문 참여국 모두 평가 계획 방식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산업 전략에 반영하는 경우는 드문 편
- 모든 설문 참여국이 전략적 지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평가 단계를 정책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전략 수집 단계의 경제 진단에 활용되는 국가 지표* 모니터링 결과 ▲정책 조치가 목표로 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전략적 분석 ▲이해관계자·수혜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 등 수행 가능
 - * 생산성, 혁신, 기업 동향, 수출, 단위 노동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신기술 도입률, 지역 간 격차 등
 - 이와 관련해 설문 참여국은 평가 과정 수립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중 아일랜드는 정책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이 정책의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 표명
- 평가 방식과 관련해 ▲역량을 하나의 부서에 집중시켜 내부 평가팀을 구성하는 방식(에스토니아 기업혁신청) ▲경쟁 입찰을 통해 외부 공급자가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이 운영되고 있는 중
 - 평가팀의 결과 확정 시 독립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 기관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표출
 - ※ 이는 연구 결과가 저널에 게재될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와 분석 방법론의 엄밀성을 중시하는 외부 학술기관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
 - 내부 평가팀이나 영리 목적의 평가기관도 체계적인 조직 체계와 품질 관리 절차를 갖춘 경우 독립성 요건을 충족 가능
 - 평가전담 부서 신설이 조직적·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자원을 해당 부서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평가 수행 부서에 기술적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도 그 결과를 해석·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 공무원이 주로 법학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특히 중요

- 이때 인센티브는 보다 체계적인 평가 관행이나 ‘평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내부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 전문 공급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은 비용 효율적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기여
- 다만, 입찰 공고 작성, 공급자 선정, 사후 평가의 품질 검증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평가 용역 발주 부서에 대한 교육 시행 필요
- ※ 우수한 평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데이터와 관련 인프라 접근권 및 정책 설계와 발전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다면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
- 평가 단계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평가의 효과와 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다른 정책 조치나 프로그램, 기관 평가를 상호 학습하는 방식도 유용
- ※ (예) 영국의 구 기업에너지산업 전략부는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평가 그룹 등 여러 평가 네트워크에 참여

■ (개선) 국가와 산하 기관은 평가 활동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받고 이를 학습하여 필요시 정책 수단을 개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수

- ※ 이때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이나 환경 변화와 같은 요소도 함께 고려
- 정부 최고위급 회의에서 평가 결과가 논의될* 경우 산업 정책이 국정 핵심 과제에 계속 포함되는 데 도움될 수 있으며, 정책 조치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 또한 평가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 (예) 아일랜드는 다수 장관이 소속된 경제투자내각위원회에 정책 평가 결과를 상정
-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공공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글로벌 공공 지식자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타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 다만, 정량적 평가 연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은 아니므로, 정책 개선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정보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정책 주기의 ‘개선’ 단계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경우 정책 조치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
- 특히 평가 과정에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면 이후 합의 형성 단계 보다 적극적인 관여·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어 정책 주기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설문 참여국들이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답변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중의 참여가 배제된 사후적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 경우에 따라 평가 결과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수정 ▲사업·프로그램의 단계적 종료 ▲상위 전략이나 거버넌스, 정책 자체의 목표 재정립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
 - 정책 수정 과정이 어렵고 변화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잦은 수정 역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정책 안정성이 장점으로 부각
 - 2개년 실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갖춘 아일랜드와 같이 명확한 평가 일정을 수립하면, 기존 정책 설계에 과도하게 비중을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정책 조치를 개선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칠레의 ‘독일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맞춤형 사업(fit for partnership with Germany)’의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 평가 진행 후 참여자의 국제적 입지 확보에 필요한 디지털 의사소통 툴을 도입
-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책을 종료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일몰 조항 없이 정책 조치가 계속해서 적체되면 시행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이때 한국과 같이 일몰 조항을 포함시키면 이해관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을 지속시키지 못하도록 방지 가능
- 반면, 새로 선출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부의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나, 정부 교체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직·간접 비용을 수반
 - ※ ▲(직접 비용) 설립 비용, 고정 조직 비용 등 발생 ▲(간접 비용)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유발, 투자 감소로 평가 시행을 저해
 - 신규 정책이나 변화를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존 정책의 효과를 개선한다는 명확한 논리에 근거해야 하며, 기존의 비효율적 프로그램 폐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각국 정부가 사전 계획 없이 신속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22년 에너지 위기 동안 기업이 필요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임시 정책 조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산업 전략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기 때문에 필요한 단기 정책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지만, 위기 상황이 학습 경험으로 활용됨으로써 산업 정책 기관의 역량 강화에 기여
 - ※ (예) 슬로베니아의 경우 전례 없는 홍수 발생으로 EU와의 협력, 경제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범정부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23년), 그동안 축적한 유연성이 강점으로 작용

Ⅲ. 결론 및 시사점

■ 산업 정책은 다른 정책 영역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데다 여러 정책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필수적

※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이행 역량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다만, 거버넌스 정책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는 더욱 부족하여 정부가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할 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이에 OECD는 국가 산업 정책의 제도적 거버넌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①전략 방향 설정 ②정책 조율 ③정책 집행 ④평가·개선의 4단계 정책 주기에 기반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
 - 특히 초기 벤치마킹 연구로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이 참여한 시범 설문 조사 결과를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리

〈표 4〉 산업 전략 거버넌스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전략 방향 설정	• 경제의 강·약점을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공식적인 절차 수립은 산업 전략 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 - 진단 결과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장 실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 이해관계자 협의 시 진단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사용 • 공식적인 전략 문서 작성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뿐만 아니라 합의 형성 수단이자 목표로 기능 • 전략 문서에 정책 개입 근거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전략 추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략적 지표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
정책 조율	• 산업 정책 조치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므로, 조치 선정·설계 시 국제 벤치마킹 활동을 포함시켜 동종 국가와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 • 산업 정책 이행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각각 다른 조치를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처 간 회의와 같은 제도화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업무 흐름을 조율 • 정부의 다양한 이해 집단의 전략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 정책을 총괄 하는 고위 관료를 지정하여 전략 추진을 뒷받침

구분	주요 내용
정책 이행	• 각 기관의 자율적인 역할이 확대되더라도, 정책 수단의 이행·평가 등에 대한 장관·고위 관료가 최종 책임과 관리를 담당 • 이행 기관은 최종 수혜자와 대면하는 조직으로, 현장 지식을 활용해 자율적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 • 각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 환경 및 공공 행정과 모두 관련된 스킬이 필요하며, 인적 자원 관리와 교육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기능
평가·개선	• 데이터 수집은 평가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책이행 기관이 선별적 지원 수단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외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 통계 기관은 해당 정보를 행정 데이터와 통합 • 정책 시행·설계를 담당하지 않은 독립적인 팀이 정책을 평가 •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책 수단 개선 논의를 촉진

■ **지정학 갈등, 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산업 정책이 산업·제조업 육성을 넘어 국가 복원력 확보를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 상황에서¹⁾,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설계·이행 거버넌스에 대한 점검·강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

- (전략 방향 설정) 경제·산업 ‘진단’ 단계에 기업 단위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방안 마련, 분석기관·학계·산업계의 분석 과정 참여 증진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정책 수립 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기업 중심의 포획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계·데이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기업, 영세 산업,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방식 강화도 고려 가능
- (정책 조율)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의 다각적인 정책 목표가 부여되면서 환경부, 과기부 등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대두
 -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협업 행정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처간 칸막이 해소, 협업 문화 증진 등의 과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별 부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범부처 계획은 부재한 상황²⁾

1) 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2025.05.

2)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의제, 2024.

- * ▲「법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최초 수립('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 협업’을 최초로 규정하고('16.4) 협업 촉진, 관련 과제 발굴 등의 내용 수록('24.5) ▲「법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20, '21) 시행 등
-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 AI·양자 등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술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 기후 위기 대응을 주관하는 환경부 등과 수평적 조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기적인 협의 체계를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정책 이행) 정책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부처 간 인사 교류 프로그램 확대, 외부 전문가 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책 홍보와 안내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기업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
- (정책 평가·개선) 우리나라는 법률로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현장의 패드백을 효율적으로 수집·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실화함으로써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매년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 **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발간현황

2025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5-01	인공지능(AI) 시대 인력 개발의 미래	2025.01
2025-0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	2025.02
2025-03	EU 청정산업딜 정책 조치	2025.03
2025-04	미국 통상정책 재정립을 위한 무역 불균형지수 분석	2025.04
2025-05	EU AI 대륙 행동계획 분석	2025.05
2025-06	기업의 AI 도입 현황 점검 및 촉진 방안 분석	2025.06
2025-07	다시 주목받는 산업정책 : 산업 전략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2025.07

2024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4-01	영국 배터리 전략	2024.01
2024-02	수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 정책 고찰	2024.02
2024-03	일본 바이오 산업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 고찰	2024.03
2024-04	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 고찰	2024.04
2024-05	미국 반도체 산업 인력 정책 제언	2024.05
2024-06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DX 전략	2024.06
2024-07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4	2024.07
2024-08	글로벌 생성형 AI 특허 현황	2024.08
2024-09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 현황	2024.09
2024-10	ASPI 핵심 기술 연구 성과 모니터링	2024.10
2024-11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한계 고찰	2024.11
2024-12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2024.12

■ 2023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3-01	미국 바이오제조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23.01
2023-02	중국 산업 디지털화 친환경화 통합 발전 제언	2023.02
2023-03	유럽 넷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	2023.03
2023-04	EU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및 재료 수요 예측	2023.04
2023-05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비전과 전략	2023.05
2023-06	주요국 반도체 정책과 미 의회 역할 검토	2023.06
2023-07	글로벌 자율주행 정책 및 산업 동향	2023.07
2023-08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 동향	2023.08
2023-09	글로벌 원자력 보급 과제와 대응 조치 고찰	2023.09
2023-10	중국 기술 정책 현황 및 미국의 대응 방향	2023.10
2023-11	EU 우주, 방위 및 관련 민간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 분석	2023.11
2023-12	미국 핵심·신흥기술 수출통제 조치 고찰	2023.12

■ 2022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2-01	OECD, 국경을 초월한 정부 혁신 달성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01
2022-02	2022 글로벌 에너지 의제	2022.02
2022-03	일본 에너지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GX) 방향성	2022.03
2022-04	2050 미래 우주 공간 활용: 영국 국가우주전략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	2022.04
2022-05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	2022.05
2022-06	유럽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금속 수요 전망 및 대응	2022.06
2022-07	주요국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 추진 현황	2022.07
2022-08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소 개발 비전과 주요 정책 동향	2022.08
2022-09	중국 CCUS 실증·보급 현황 및 정책제언	2022.09
2022-10	미국 에너지부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	2022.10
2022-11	미국 첨단제조 국가 전략	2022.11
2022-12	글로벌 인재 이동 동향 및 시사점	2022.12

■ 2021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1-01	유럽 녹색산업 정책을 위한 제언	2021.01
2021-02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전략 제언	2021.03
2021-03	기후 주도 무역 아젠다를 위한 제언	2021.04
2021-04	중국 14.5규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5
2021-05	산업단지의 순환경제 도입 현황 및 전망	2021.06
2021-06	유럽 그린딜에서의 인공지능 역할과 시사점	2021.07
2021-07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① : 반도체 및 배터리	2021.07
2021-08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② : 핵심 광물·소재 및 의약품	2021.08
2021-09	유럽 첨단기술 동향 및 차세대 신흥기술 확산 전망 고찰	2021.10
2021-10	OECD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1
2021-11	IEA 글로벌 수소리뷰 2021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2
2021-12	CX2030 가상현실에 의한 '30년 커뮤니케이션 전환	2021.12

■ 2020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0-01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 분석 : 유럽연합(EU)·영국·독일·프랑스	2020.01
2020-02	일본, 제 11차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미래상'	2020.02
2020-03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 확보 전략 : AV 4.0	2020.04
2020-04	주요국 규제 사례를 통해 본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방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04
2020-05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OECD의 분야별 정책 권고 주요 내용	2020.06
2020-06	혁신 창출 환경 및 주요 산업별 혁신 변화의 추이와 전망	2020.07
2020-07	영국의 넷제로(Net-Zero)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인력 정책 방향 제언	2020.08
2020-08	EU·독일·호주 수소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08
2020-09	최근 미국과 중국 AI 정책동향 및 시사점	2020.09
2020-10	연구개발·혁신 파이낸싱 동향과 정책 과제	2020.10
2020-11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미국의 국가 간 공조를 통한 산업 발전 방안 제언	2020.11
2020-12	디지털 시대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2020.12

■ 2019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19-01	「미국 혁신 촉진을 위한 투자주의 이니셔티브」 독서 초안	2019.01
2019-02	주요국 연구자금 지원기관 조직설계 및 거버넌스	2019.02
2019-03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	2019.03
2019-04	독일의 포괄적인 AI 생태계 조성 전략	2019.05
2019-05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2019.05
2019-06	OECD 국가의 디지털 혁신 정책 현황	2019.06
2019-07	중국 : 산업 및 혁신강국으로의 도전과 전망	2019.07
2019-08	영국의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기 보급방안	2019.08
2019-09	Horizon Europe(2021-2027)의 산업혁신 프레임워크	2019.09
2019-10	AI 산업 및 국가별 정책 동향	2019.11
2019-11	주요국의 R&D 예산 및 투자 전략(I):미국의 NITRD와 EU의 다년도 지출예산(안)을 중심으로	2019.12
2019-12	주요국의 R&D 예산과 투자 전략(II):R&D 및 기업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2019.12
2019-13	주요국의 R&D 전략과 예산배분 시스템,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전망	2019.12
2019-14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분석 :미국·일본·중국·인도	2019.12

※ ~ 2025년 현재까지 발간물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열람 가능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KIAT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Brief

발 행 일	2025년 7월
발 행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발 행 인	민병주 원장
기획/진행	문희수 실장, 정휘상 선임연구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02-6009-3593 www.kiat.or.kr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주목받는 산업정책 : 산업 전략의 제도적 프레임워크